

統一情勢分析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2004. 2

박형중 (평화안보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요 약>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논조 변화>

-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논조는 주로 6·15 공동선언의 ‘통일이정표’론, ‘우리 민족끼리’론, ‘민족공조’론 등을 앞에 내세우고 강조하면서,
 - 당국 차원에서는 적대가 아니라 협력의 가능성, 민간차원에서는 반정부·반미 선동이 아니라 교류·협력의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음.

- 남북관계가 북한의 의도대로 전개되지 못하는 책임을 미국의 간섭과 한국정부의 ‘외세와의 공조’로 전가하는 가운데, 북한 대남논조의 강조점이 시기별로 변화함.
 - 개략적으로 보면, 6·15 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2000.6) → 6·15 공동선언을 역풍으로부터 지키기(2001.6) → 민족공조를 통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2002.1) → 반미·반전을 위한 민족공조(2003.1) 순으로 변화

<2004년도 대남논조>

- 북한은 2004년도 초 미국이 “핵문제를 구실로 남조선 당국에 북

남관계를 전면 차단할 것” 또는 “진전속도를 조절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여 강조

○북한은 2004년도의 주요 목표로서 “민족제일주의의 기치 밑에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하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갈 것”을 제시

○2004년도 북한의 대남논조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장 강력하게 ‘반미자주화’를 내세우면서 남북협력 강화, 즉 ‘민족공조’를 요구

- 미국이 남북관계 진전에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집중 부각
- 미국을 직접 지칭하고 ‘반미자주화 투쟁’을 선동
- ‘우리민족제일주의’론을 동원하여 ‘민족공조’가 ‘온 민족’적 사안임을 강조

○이러한 대남논조의 배경과 의도는

- 대남사업 추진에서 북측 내부 합의 유지
- 대남정책 목표의 경화 가능성
- 협상 주도권 장악을 위한 단순한 전술적 선택
- 한국의 내부여론에 영향력 행사
- 북측의 개혁·개방의지 선전
- 6자회담 후 남북관계에 대한 사전 포석 등으로 추정

<대남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 2004년도의 관련 논조를 볼 때, 북한은 금년도에 당국 및 민간 접촉과 교류에서 ‘민족공조’론 등 이데올로기적 주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기존 남북한 간의 각종 교류와 협력을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당국간 접촉 및 민간급 각종 교류와 협력에서 ‘우리 민족끼리’와 ‘민족공조’를 보다 강하게 주장하면서, 남북한간에 합의되는 각종 문서를 명문화하자고 나올 것으로 예상

- 북한 측이 당국간 및 민간 교류·협력에서 이데올로기적 이념성을 강조하면 우리 측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으나,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원칙을 지킴.
 - 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남북간 교류와 협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목 차 -

| | |
|---------------------------------|----|
| I. 서론 | 1 |
| II.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논조 변화 | 2 |
| III. 2004년도 대남논조 | 4 |
| 1. 연초 주요 논조 | 4 |
| 2. 주요 특징 | 6 |
| 3. 배경과 의도 | 7 |
| IV. 대남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 10 |
| 1. 대남정책 전망 | 10 |
| 2. 대응 방안 | 11 |

I. 서론

- 북한의 대남정책은 기본논조를 기초로 변화하는 정세에 맞추어 시기마다 강조점을 변경해 옴.
-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논조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이정표’로 내세우면서,
 - ‘우리 민족끼리’와 함께 ‘민족공조’를 주요 단어로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 2001년 이후 각 년도마다 상이한 강조점을 내세우고 있음.
- 2004년도 북한 대남정책의 핵심 표어는 “우리민족제일주의의 기치 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이며,
 - 13차 남북장관급 회담(2.3~2.6)에서 ‘우리 민족끼리’를 공동보도문에 삽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함.
- 이 글은
 -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대남정책의 기본논조와 시기상의 변화를 서술하고,
 - ‘우리 민족끼리’와 ‘민족공조’를 유달리 강조하고 있는 2004년도 대남정책 논조의 특징, 그 배경 및 의도에 대하여 분석함.

II.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논조 변화

-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측은 ‘조국통일 3대헌장’론, ‘민족대단결’론과 ‘연방제통일’론 등 전통적 대남정책 논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 주로 6·15 공동선언의 ‘통일이정표’론, ‘우리 민족끼리’론, ‘민족공조’론 등을 앞에 내세우고 강조하면서,
 - 당국 차원에서는 적대가 아니라 협력의 가능성, 민간차원에서 반정부·반미 선동이 아니라 교류·협력의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음.

- 북한은 남북관계의 전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을 열어가는 사업’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개되고 있는 남북간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북한식 ‘조국통일’론에 맞추어 북한 내부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음.

- 남북관계가 북한의 의도대로 전개되지 못하는 책임을 미국의 간섭과 한국정부의 ‘외세와의 공조’로 전가하는 가운데, 북한 대남논조의 강조점이 시기별로 변화함.
 - 개략적으로 보면, 6·15 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2000.6) → 6·15 공동선언을 역풍으로부터 지키기(2001.6) → 민족공조를 통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2002.1) → 반미·반전을

위한 민족공조(2003.1) 순으로 변화

- 이러한 변화는 2001년 부시 정부 등장과 6월 대북정책 발표, 9·11 사태와 2002년 1월 ‘악의 축’론, 6월 서해교전, 10월 핵문제 대두와 위기 고조, 연말 ‘촛불 시위’ 등 한국에서의 반미 정서 고조, 2003년 3자회담과 6자회담 등 남·북·미간 관계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

○ 초반기에는 ‘우리 민족끼리’론이 우세하다가 점차 ‘남북공조’론의 사용 빈도수가 증가

- ‘우리 민족끼리’라는 용어는 남북간 교류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로 사용
- ‘민족공조’라는 용어는 2002년 신년공동사설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남북관계의 전진을 방해하는 주범인 미국에 반대하면서 남북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으로 주로 사용

○ 2002년 이후, 과거에는 대남정책과 관계없이 주로 북한 내부에 관련되어 사용되던 ‘선군정치’와 ‘우리민족제일주의’를 남북관계에 적용하여, 두 사항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을 포함한 ‘온 겨레’에 해당한다는 것을 강조

Ⅲ. 2004년도 대남논조

1. 연초 주요 논조

○북한은 연초 미국이 “핵문제를 구실로 남조선 당국에 북남관계를 전면 차단할 것” 또는 “진전속도를 조절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여 강조¹⁾

-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6·15 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추진되는 북남사이의 철도, 도로연결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업지구 건설 등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과정을 전면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²⁾

- 따라서 “온 민족이 우리민족제일주의의 기치아래 전체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민족적 반미항전에 일떠서야 한다”고 주장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의(1.19)는 “올해 민족제일주의의 기치 밑에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하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5개 항목을 제시

- 첫째, 우리민족제일주의 고취,
- 둘째, 미국의 민족 이간 책동에 맞서 민족공조 실현,

1) 『조선중앙방송』, 2004.1.12, 1.15; 『평양방송』, 2004.1.11, 1.21.

2) 『평양방송』, 2004.1.18.

- 셋째,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반미성전,
- 넷째, 6·15 공동선언의 철저 구현,
- 다섯째, 선군정치 지지

○또한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의는 대남정책 관련 한국의 각계각층에 대한 임무를 설정³⁾

- 당국과 정치인: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첫 자리에’, ‘민족공조의 길에 들어서야’
- 노동계급: ‘미제의 새 전쟁도발과 민족이간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 청년학생: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조를 실천으로 해결’

○13차 남북장관급 회담(2004.2.3~6)에서 북측의 논리와 제안 의제는 위의 ‘당국과 정치인’에 대한 사업 목표에 부응함.

- 김령성은 기초 발언에서 ‘민족공조에서 기본은 책임있는 당국자 사이의 공조’라는 것이며, 당국 공조를 높은 단계로 이끔으로서, 민간급 공조를 추동할 것을 주장하고,
- 당국 공조의 주요 과제로서, 핵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입장 지지와 남북경제협력을 쌍방 당국이 책임지고 진척시킬 것을 제시⁴⁾

3)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한 바 있음. 『로동신문』, 2001.1.11.

4) 『조선신보』, 2004.2.4

- 북한은 13차 장관급 회담에서 한국이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저버렸다”고 공격한 후, 공동보도문에 ‘우리 민족끼리’를 삽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
 - 남북한 합의에 따라 북측 보도문에만 삽입
 - 북한은 『로동신문』(2.12) 논평을 통해 남측의 보도문에 동 구절이 빠졌다고 강력히 비판

2. 주요 특징

- 2004년도 북한의 대남논조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장 강력하게 ‘반미자주화’를 내세우면서 남북협력 강화, 즉 ‘민족공조’를 요구
 - 미국이 남북관계 진전에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집중 부각
 - 미국을 직접 지칭하고 ‘반미자주화 투쟁’을 선동
 - ‘우리민족제일주의’론을 동원하여 ‘민족공조’가 ‘온 민족’적 사안임을 강조
- ‘당국과 정치인’, ‘노동계급’, ‘청년학생’ 등 대남사업의 주요 대상을 분류하고 사업목표를 제시
- 이밖에도 장관급 회담 공동 보도문에서 과거와는 달리 ‘우리 민족끼리’를 삽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

3. 배경과 의도

○ 대남사업 추진에서 북측 내부 합의 유지

-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개발 등과 관련, 군부의 쉽지 않은 양보가 있었으나, 금강산관광은 축소되는 등 경제적 실익이 감소하는 한편, 개성과 관련해서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지 않다는 내부 불만과 한국과의 교류 및 접촉 확대에 의한 내부 오염에 대한 우려가 존재
- ‘민족공조’의 강조를 통해 한국 정부를 몰아세우고, 민간교류에서 이념적 명분을 강화함으로써, 내부 불만을 완화하고 북측 파견단 또는 접견단 내부의 규율을 유지

○ 대남정책 목표의 경화 가능성

- 김용순 사망후, 그 후임 임동옥의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임동옥의 위상이 김용순에 비해 낮기 때문에 대남정책 수립에서 강경세력의 입장이 강화되었을 가능성 존재

○ 협상 주도권 장악을 위한 단순한 전술적 선택

- 한국 측은 현실적으로 ‘핵과 경협확대 연계’론을 펼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항하면서 ‘핵문제 해결과 경협확대 연계’ 해제를 요구하는 논리로서 ‘우리 민족끼리’론을 활용
-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고 분쟁거리를 만들어 낼수록 한국 측의 ‘핵문제 해결과 경협확대 연계’론과 더욱더 큰 대비를

만들어 낼 수 있음.

- 북한이 남측과의 협상에서 치열한 논쟁거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대항지렛대 상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

○ 한국의 내부여론에 영향력 행사

- ‘자주파’와 ‘동맹파’의 분란, 이라크전 파병, 핵문제에 관한 미국의 강경 입장 등 때문에 한국 내에 팽배한 반미·반전 조류에 편승하여 한국정부를 ‘민족공조’로 몰아세우는 정치적 압력을 증가

○ 북측의 개혁·개방의지 선전

- 북한이 남북교류 협력 확대에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북한의 ‘변화’ 및 개혁·개방 의지를 한국 및 주변국가에 인식시키는 북한식 방법

○ 6자회담 후 남북관계에 대한 사전 포석

- 2차 6자회담 관련, 북한은 내부적으로 협상안 또는 양보의 한계를 이미 결정했을 것이며, 미국의 반응에 대한 대강의 예측을 가지고 있을 것
- 결렬 시: 한국이 결렬을 이유로 대북 경제지원과 지원성 교류를 선불리 감소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명분상의 함정이자, 한국 내부정치적 압박을 형성

- 성사 시: 성사 때문에 한국이 핵과 경협 연계를 ‘시혜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북한 측의 강한 압박이 존재하는 가운데, 한국이 밀려서 경협 확대로 들어가는 모양새를 갖춤으로써 명분상 주도권 확보

IV. 대남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1. 대남정책 전망

- 2004년도의 관련 논조를 볼 때, 북한은 금년도에 당국 및 민간 접촉과 교류에서 ‘민족공조’론 등 이데올로기적 주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남측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노리며, 양보를 유도하고 각종 남북 접촉에서 북쪽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 북측의 내부규율을 강화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 확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북측 내부 보수세력을 무마함.

- 그러나 기존의 남북한 간의 각종 교류와 협력을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내부적으로 남북관계의 여러 교류와 협력이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차원에서 설명해 옴.
 - 남북관계의 유지와 진전이 북한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과 외교적 교섭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 경제적으로도 남측으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

- 북한은 당국간 접촉 및 민간급 각종 교류와 협력에서 ‘우리 민족끼리’와 ‘민족공조’를 보다 강하게 주장하면서 남북한간에 합의되

는 각종 문서에 명문화하자고 나올 것으로 예상

- 당국간 접촉, 민간급에서의 정치성 회동, 청년·학생과의 접촉 등에 대해 관계의 성격에 맞게 차별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관철시키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

2. 대응 방안

<당국간 접촉 시>

- 북한은 정부당국간 접촉 과정에서는 1) 핵문제와 관련, 북한 입장 지지, 2) 개성공단, 철도연결 등 경제협력의 가속화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임.
 - 이에 대해, 한국은 핵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진지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경제협력이 기술적 문제로 급진전될 수 없었던 현실을 설명
 - 경제협력이 안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북측의 경제제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에서 보다 더 전향적 자세를 취하며, 국제적 신인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
- 무엇보다 북한도 한국민의 신임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특히 남북한 안보와 평화 문제에서 성의를 보여야 하며, 따라서 조속히 군사회담에 응할 것을 요구
 - 특히 북한이 서해에서의 안보상 불안 문제, 휴전선에서의 군

사대치 문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문제 등에서 획기적으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면 한국민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
는 것을 주지시키고,

- 현안에서 실질적 기여없이 지나친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통해
'민족공조,' '우리 민족끼리' 등을 강조하게 되면, 한국민의 여
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을 강조

<민간 접촉 시>

- 북한은 금년도의 각종 민간 교류 사업에서 과거에 비하여 이데
올로기적 공세를 강화할 것이며, 자체 규율 유지를 위한 내부 단
속과 교육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북한 측이 민간 교류·협력에서 이데올로기적 이념성을 강조하면
우리 측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으나,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원칙
을 지킴
 -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간의 내정불간섭을 약속했는데, 만약
북한 당국이 우리 측 민간단체나 학생들을 선동하거나 이용
하려 든다면,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조
- '민족공조'라는 말 대신에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 등의 용어를
구사하며, 자유·평화·민주 등 한국 측의 '통일 3원칙'도 거론되

도록 할 것

- 북한 측은 자신들의 상투적 통일 논리(조국통일 3대헌장론 등)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한편, 과거 남북간에 체결된 여러 문서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조국통일 3대원칙’)만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남과 북의 공동문서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음.

○ 남북한 당국이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을 전반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합의하는 경우, 그 때에는 ‘통일’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며, 명실상부하게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을 주지시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2004년도에도 핵문제와 관련한 교착 상태가 지속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화과 지원’의 원칙은 궁지에 몰리게 될 수도 있음.
 - 핵문제 및 남북한 교류 및 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되기 때문
 - 이미 13차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면서 남측의 핵문제와 경협확대 연계를 풀도록 압박을 가해왔으며, 다른 한편에서, 2004년도에 개성공단사업이 1만평 시

범단지 출범 등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국 측은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음.

○이러한 궁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한국은 핵문제에 관하여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